

ASEAN+3 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배궁찬*

I.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정체성의 문제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역내국가들간 무역 및 투자관계 증진 등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는 지역협력구도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지역에는 이 지역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공식적 지역협력제도 결성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유럽의 EU 및 북미의 NAFTA 결성 등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제기된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구상도 일본, 한국 등 주요 관련국들의 소극적 태도와 미국 등 역외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으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문제는 한동안 표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ASEM의 출범과 1997년 동아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역내국가들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ASEM의 출범에 따라 고도로 통합된 유럽 EU와 그룹대 그룹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gcbac89@mofat.go.kr

간 직접협상을 하게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처음으로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부적절한 처방 및 서방 선진국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에 실망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조적 차원에서 역내국가들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했던 역내세력은 애초에 EAEC를 추진했던 ASEAN이었으며, 이는 곧 ASEAN+3 협력구도로 표출되었다. ASEAN은 1997년 12월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함으로써 ASEAN+3, 즉 사실상의 동아시아 국가간 정상회의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어 현재까지 여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구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천명하였다. 한편 제3차 정상회의 직전에 일본측 제안에 따라 한·중·일 정상들간 조찬회동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의 동북아국가들간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동에서 정상들은 3국의 국책연구기관간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고, 이러한 동북아 3국간 정상회동도 정례화시킴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전개되어 왔다. 2000년 5월 최초의 ASEAN+3 경제장관회의가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2000년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역내국가들간 통화스왑제도(currency swapping)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금융협력방안(CMI, Chiang Mai Initiative)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방콕에서 최초의 ASEAN+3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정례화되었는데, 이

는 향후 역내국가들간 정치 및 안보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국가들간 역내협력은 최근 보다 더 가시화, 공식화되고 있으며, ASEAN+3 구도는 하나의 느슨한 지역협력체(a loose regional cooperation entity)로서 국제무대에 새롭게 각인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ASEAN+3 협력구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왔는 바, 민간차원(track II)의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정부차원(track I)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이 바로 그런 것들이며, 이는 ASEAN+3 협력의 개념적,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제2차 ASEAN+3 정상회의시 김대중 대통령은 향후 ASEAN+3 협력구도의 발전방향과 포괄적인 지역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제안했으며, 한국의 비전그룹 구성방안은 중국, 일본, ASEAN 등 관련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출범한 이후 5차례의 비전그룹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부르나이에서 개최된 2001년 11월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¹⁾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역내국가들간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²⁾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역내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투자, 금융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확립하

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n Vision Group Report, (October 31, 2001)

2) 비전그룹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영문으로 East Asia Community가 아니라 East Asia community로 표현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도로 통합된 유럽의 European Community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그룹 보고서는 무역, 투자, 금융, 사회간접자원 개발, 정보통신기술, 인사교류, 평화증진, 분쟁예방 및 관리,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환경, 식량 및 수자원, 비정부 사회부문(NGO) 교류 활성화, 해양자원 보호, 에너지, 과학기술,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협력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가장 핵심적 협력분야는 역시 무역, 투자,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경제분야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는 경제통상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궁극적으로 지역금융기구(a full-fledged regional financing facility)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금융통화분야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전그룹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미 5차례 개최된 회의를 통해 무역 및 투자, 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분야 등에 있어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거의 모든 주요 의제들이 제기, 검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결성이라든지 지역금융협력기구 추진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전그룹 보고서가 가장 미진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 도출 또는 함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비전그룹 보고서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주요 과제로 삼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정체성이란 어떤 지역의 역내협력을 촉진하고 역내국가들간 내부적 결속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공동의 의식 또는 인식의 기반인 바, 이러한 정체성이 결여된 지역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기초한 국가간 거래에 국한됨

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함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찾아내야 할 것이고, 지역적 정체성이 취약하다면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체성이란 반드시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진화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상호공통의 일치점에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³⁾ (Emanuel Adler 1997:252)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도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 어떤 공통의 합치점에 수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성격을 규명하고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과거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지리적 조건, 정치적 역동성, 경제통합 과정, 제도적 접근, 문화적 가치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정체성을 창출, 함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정체성에 대하여 Adler는 구성주의적 시각(constructivist perspective)에서 "State social identities and interests are not fixed but evolve from the diffusion and convergence of causal and normative understandings across national boundaries, high levels of communicatio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ve practices. Furthermore, not only do identities and interests evolve, they also have the potential to converge." 라고 주장한다.

II.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과정

1. 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

아시아라는 어휘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인 스스로에 의해 규정된 지리적 개념은 아니다. 회랍어로 동쪽을 의미하는 아시아(Asia)라는 개념은 원래 고대 서구로부터 나왔다(Mark Borthwick 1992:3). 서구에서 볼 때 아시아는 동쪽의 넓은 대륙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했던 동양인들, 특히 아시아대륙의 핵심부를 차지한 중국인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애초 스스로를 서양에 대해 동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라는 개념은 서구문화 유산의 소산인 것이다.

서구인들은 또한 동쪽의 위치도 자신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위치에 따라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 아시아는 정치지리적 개념에 따라 크게 동아시아(East Asia), 남아시아(South Asia), 중동아시아(Middle East Asia)로 구분되며, 동아시아도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로 나뉘어지고 남아시아는 종종 서남아시아(Southwest Asia)와 혼용되어 쓰여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개념도 확실히 구분되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지칭하여 쓰여지고 있고 동남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의 주변지역으로서 동남아의 역사, 정치, 외교, 경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때, 특히 동남아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일관하고 하고 있는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라고 할 때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여 통

4) 한국에서 소위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또는 일본 전문가들

칭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다. 즉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북한,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통칭한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란 바로 이러한 지리적 개념에 의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또는 아태지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지리적 개념이 생겨났다. 아태지역이란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쪽 연안 지역인 동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Oceania), 그리고 태평양 동쪽 연안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남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국가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태지역과 동아시아지역은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EAEC 그리고 ASEAN+3와 동아시아국가들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태평양지역 역외국들이 포함된 APEC과는 대상지역과 국가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

비록 동아시아가 그 내재적 다양성 때문에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의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지역국가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사적, 지리문화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단순히 특정 국가나 민족 중심 또는 대륙적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해양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또 다른 동아시아의 역사적 정체

로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체계 틀 안에서 동남아는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지식인들의 연구성과물을 볼 때 더욱 그러하며, 대표적으로 정문길(1995, 2000)을 참조.

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양적 정체성(a maritime identity) 또는 해양지역의 정체성(identity of a maritime region)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Takeshi Hamashita 2001:9)

먼저 동아시아의 해양지리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여러 해양들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S자의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종 해양들에 의해 형성된 사슬형태의 반도와 부속 도서들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리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 해양지역이란 대양보다는 작으며 내륙보다는 만(灣)이나 내해와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해양의 교차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무역연계망도 S자 곡선에 따라 한반도의 부산, 일본열도의 나가사키, 중국의 상해 및 홍콩, 말라카 반도의 싱가포르 등과 같은 무역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계하는 중국의 동부해안은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도양으로 통하는 출입로가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일차적으로 전통시대 중국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John K. Fairbank, ed.:1968). 전통시대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중화사상(中華思想)과 화이(華夷)의 엄격한 구분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적 우월감에 바탕한 것이다.⁵⁾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던 중국인들은 자신들만이 문명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의 미개인들은 궁극적으로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물론 중국은 자주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는 주변부 족속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기도 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언제나 주변부 족속들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5)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언제나 중국 중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통시대의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때때로 자신들보다 작은 주변국가들에 대해 스스로 중심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러한 원칙은 유교적 덕의 규범에 의한 서열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었다.

아니었기 때문에, 비군사적 방법을 통하여 골치 아픈 주변부 족속들을 평화스럽고 효율적으로 다스려나갈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고안해 낸 것이 조공무역과 책봉체제였다. 조공무역은 중국문명을 동경하는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문물을 수출함으로써 그들에게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고, 책봉체제는 중국의 황제, 즉 지상의 최고지도자인 천자의 권위를 가지고 주변국 왕조들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조공무역과 책봉체제를 통하여 주변국들을 중국 중심의 위계적 국제질서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이를 관리해 왔다.

특히 중국의 당(唐)시대부터 청(淸)조까지 이어졌던 주변국과의 공물관계는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을 창출해 내는데 핵심적 근간이 되었다.⁶⁾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중심의 질서체제하에서 공물국가들은 중국의 수도에 공물 사절단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중국의 황제는 새로운 주변국의 지배자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물관계란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조정에 보내질 선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물 상납자들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비단과 다른 귀중한 상품들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사절을 수행하는 승인받은 무역업자들은 중국수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상업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히 승인받은 무역업자들보다 열 배나 많은 숫자의 상인들이 중국의 국경과 항구에서 지방상인들과 다양한 상품들을

6) 그러나 과거 중국은 동이(東夷)와 남만(南蠻)으로 불렸던 오늘날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당시 세계의 중심국가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국경을 위협하고 자주 침범했던 주변족속은 북적(北狄)과 서융(西融)이었다. 주변국들 중 한 국은 중화질서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동남아국가들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위협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활발히 교환하였다는 점이다 (Takeshi Hamashita 1997).

당시 동아시아 해양지역에는 중국계 화교상인들과 일본, 한국, 인도, 중동 지역의 무슬림, 유럽출신의 상인들까지 공물교역에 참여했는데, 이는 해양지역간에 연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⁷⁾ 즉 과거 동아시아 해양지역은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물지역이자 무역지역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추적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근거로서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과 기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⁸⁾

3.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체제로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최초의 역외세력은 미국이었다.⁹⁾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전후 동아시아 지역 형성과정의 초기단계

- 7) 중국에게 동아시아를 특별한 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화교였다. 동아시아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화교의 역사는 이미 기원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과거 중국조정은 중국인의 해외이주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히 통제했지만, 이미 12~3세기 이후 중국인들은 말라카 해협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각지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아랍의 무역상과 나중에 새롭게 진출한 서구세력들과 경쟁할 정도로 왕성한 상업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는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는 물론 후일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이와 관련 박사명 외(2000) 참조.
- 8)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적 정체성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으로서 중국인들의 활동상과 관련하여 Sterling Seagrave (1997)와 동남아시아의 해양무역 활동에 대해 Anthony Reid(1988) 참조.
- 9) 미국에 앞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전략지역으로 간주한 최초의 역내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이미 1930년대와 40년대 오늘날 동아시아지역을 자신의 독점적 경제영역권으로 통합하려는 소위 『대동아 공영권』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태평양전쟁

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Takashi Shiraishi 2001:28~29). 1940년대 미국은 중국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여 “중국과 인근지역(China and vicinities)”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냉전시기 도래이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국민당 정권의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핵심적 동맹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949년 중국공산당의 대륙제패와 더불어 이러한 호칭과 인식은 곧바로 깨어져 버렸고, 미국은 새로운 목적과 개념에 입각한 아시아 전략을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하나는 소련 및 중국 등 국제공산주의를 정치, 군사, 경제, 이념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한국, 남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비공산국가들을 공산주의 침투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동맹세력으로서 일본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일본이 다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미국의 영향력 하에 철저히 묶어두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안보적으로 이중봉쇄(double containment)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통합하여 미국의 지배하에 묶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양자안보관계를 맺고 기지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을 중심 축으로 하는 바릿살 모양(a hub-and-spoke system)의 안보동맹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양자안보동맹관계는 냉전이 끝난 현재에 있어서도 이 지역 안보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¹⁰⁾

한편 이 지역의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 그리고 동남아, 한국, 대

을 개시했다. 당시 일본이 상정했던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만주, 중국본토, 화란령 동인도제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영국령 말레이반도 및 미얀마 그리고 미국령 필리핀 등 현재의 동아시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W.G. Beasley(1999).

10) 물론 1994년에 출범한 ARF는 아태지역의 중요한 정치안보대화기구이기는 하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양자안보동맹체제를 결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등과 삼각무역구조를 설정했다. 1945년 이전에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었지만,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했다(Bruce Cummings 1984:4). 즉 미국은 일본의 전후재건을 위해 중국대신 동남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틀 안에서 미국-일본-동남아간 삼각무역구조가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양자안보동맹관계와 삼각무역구조는 1950년대 냉전초기 동아시아의 안보와 무역의 기본구조로 정착하였는데, 이는 중국 공산주의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구도 안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미국이외에 어떤 세력도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의 기본구조를 설정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전후재건은 실질적으로 동남아 시장보다는 한국전쟁과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지만, 미국-일본-동남아간 삼각구조는 이미 그때 형성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외적으로 고립되었던 문화혁명기를 거쳐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중국이 무역과 투자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가 하나의 정치지리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냉전초기 패권국가인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체제 형성과정은 결코 역내국가들로 하여금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을 일깨우거나 자극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전략적 고려와 필요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며,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진영에 서야만 했던 대부분의 역내국가들은 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4.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

냉전초기 미국은 자신의 전략구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기본골격을 만들어 냈지만, 역내국가들간 지역통합의 기초는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전술한 바 있듯이 미국에 의해 형성된 일본-동남아, 한국, 대만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과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는 일본의 무역진출과 자원 확보 차원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일본과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의미있는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대폭 절상되고, 일본을 필두로 한국, 대만자본의 직접투자가 동남아시아에 확대되어 소위 동아시아지역 경제발전의 안행형(flying geese) 모델을 만들어 냈다.¹¹⁾ 특히 1985년을 기점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경제, 기술, 인적자원개발 지원의 증대를 통하여 동남아국가들의 고도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곧바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그리고 동남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이때부터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경제 기적”이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동아시아를 중요한 경제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의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 안보적 역할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전환은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구도와 병존하고 있으며

11) 안행형 모델과 관련 Richard Doner, “Japanese Foreign Investment and the Creation of a Pacific Asian Region,” in J. Frankel and M. Kahler, eds.(1993).

상호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구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대중화경제권(Greater China)이다. 이는 1978년 이후 중국이 경제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이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중화경제권은 중국대륙과 홍콩, 대만간의 중화권 경제통합은 물론, 여기 에다 동남아 각국의 화교자본과의 비공식적 연계를 포함한 국경을 초월한 중국인들의 거대한 경제협력 구도를 지칭하는 것이다(배궁찬 1995). 중화경제권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자본간 초국가적 무역과 투자의 증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중국은 대중화경제권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중국인들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함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중심의 경제 지배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특한 비공식적 형태의 네트워크에 의해 이미 상당수준 심화되어 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또는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로 불려지고 있는데, 배타적이지 않고 구속력을 갖지 않은 시장주도의 지역통합은 자유무역주의에도 부합하고 합의를 존중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이나 일본과 역내 여타 국가들간 과거 식민지 역사를 고려할 때도 타당하다고 간주되어 왔다.¹²⁾ 일본은 동아시아지역내 자신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 거미줄과 같은 역내 경제적 연계망을 구축,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거래망(business network)은 시장에서의 단기적 거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므로써 공식적,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¹³⁾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화교자본가들간 시장 거래망도

12) Peter J. Katzenstein,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1997).

동아시아지역의 비공식 지역통합의 양대 흐름으로서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공식 연계망이 언제까지 얼마만큼 공식적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이러한 비공식 제도들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보다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접근들은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5. 제도적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모색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 지역협력 구도는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주창한 EAEC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일본, 한국 등 주요 관련국들의 소극적 태도와 미국 등 역외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으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모색과정은 한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6년 ASEM의 출범은 동아시아국가들간 지역협력을 모색케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ASEM의 출범에 따라 고도로 통합된 유럽 EU와 그룹대 그룹간 직접협상을 하게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처음으로 지역적 정체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역내국가들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부적절한 처방 및 서방 선진국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에 실망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조(自

13) Richard Doner, "Japan in East Asia: Institutions and Regional Leadership," in Peter J. Katzenstein & Takashi Shiraishi, eds.(1997).

14) Mark Seldon, "China, Japan and the Regional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1945-1995," in Peter J. Katzenstein & Takashi Shiraishi eds. (1997).

助)적 차원에서 역내국가들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따라 199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ASEAN+3 협력구도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ASEAN+3의 제도적 협력구도는 일차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결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ASEAN, 일본-싱가폴, 일본-ASEAN, 한국-일본, 한국-태국, 한국-ASEAN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설치문제가 논의, 모색되고 있다. 이미 일본과 싱가폴은 협상을 끝내고 2002년 1월 공식적으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지대 추진문제는 1998년부터 양국간 비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자유무역지대 설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

특히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 국가들이 향후 10년내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키로 합의했는 바,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간 자유무역지대 창설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이 중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키로 한 배경은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일차적으로 높은 대미교역 의존도에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기존의 대 ASEAN 교역적자 구조를 감수하면서도 WTO 가입으로 향후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직접투자(2000년 현재 중국 400억 달러, ASEAN 150억 달러)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ASEAN 국가들을 친중화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⁶⁾ 향

15) APEC 및 ASEM 등에서 북미와 유럽국가들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6)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AFTA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직접

후 중국-ASEAN간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중심 축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설치합의는 아직 어떠한 협력구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2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은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⁷⁾

한편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더불어 동아시아 금융기구 설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아시아 통화기금(AMF)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과 IMF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던 ASEAN이 중국과 자유무역지대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하여 실질적 이득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SEAN으로서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고착된 일본과의 경제통합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선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시아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화교자본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중화경제권 구상을 암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배궁찬 2001:8~9).

17) 현재 동남아국가들간 역내교역비율은 24% 정도이며 동북아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비중도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의 역내교역비중(홍콩, 대만 제외)은 33% 이상으로서 비록 EU의 60%와 NAFTA의 42% 보다는 낮으나, 동아시아가 동북아와 동남아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역내교역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경우 역내협력의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11월에 제출된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차입협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st Asia Monetary Fund)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IMF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독자적이 아니라 보완적 지역금융기구로서 위상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역외국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지역금융기구 설립은 역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발생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전히 미국, EU, IMF 등 서방 국가들의 반대나 유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국가들간 금융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발전단계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단 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새로운 지역금융협력기구 설립을 곧바로 추진하기보다는, 2000년 5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이제 거의 출범단계에 접어든 동아시아 국가들간 통화스왑계약(currency swapping)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¹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기존의 불안정한 ASEAN+3 협력형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일차적으로 완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느슨한 ASEAN+3 협력구도를 탈피하여 향후 보다 체계화된 동아시아 협력구도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내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점차 불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18) 현재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금액을 지원키로 하는 양자간 스왑계약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기존 ASEAN 5개국의 통화스왑계약을 여타 ASEAN 회원국들에게 확대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아니라 ASEAN+3 협력체제의 경우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사무국 및 각종 절차)이 취약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선정, 시행 등에 있어서도 체계성 및 효율성이 결여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고 지역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협력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동남아 ASEAN 중심의 협력구도를 유지해 왔으며, ASEAN 국가들간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간의 ASEAN 중심의 협력구도를 넘어서서 동남아 ASEAN 10개국과 동북아 3개국이 모두 동등한 자격(equal footing)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의 정체성 상실 가능성을 우려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체제의 전환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6. 아시아적 가치논쟁

동아시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바로 1990년대 동서양간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문제이다. 동양과 서양이 수세기 전 처음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간 문화의 차이와 우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군사, 과학 기술적으로 동양을 앞섰던 서양이 동양문화의 전근대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쳤지만, 최근의 가치논쟁은 역으로 아시아가 서구문화의 윤리적 퇴폐성을 공격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우월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싱가포르의 전수상 이광요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을 필두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중국 강택민 주석 등 아시아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서구적 가치 및 서구적 발전모델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아시아적 가치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동서양의 가치논쟁은 단순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질서와 기강문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무역관행과 시장개방 문제, 경제성장과 외환위기, 안보협력 문제 등을 포함하는 국제관계의 전 영역에서 논쟁의 핵심이 된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동서양간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역내지도자들간 찬반논쟁 및 각국내 정치엘리트들간 정치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논쟁이 촉발된 배경은 냉전종식 이후 신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 새롭게 부상한 미국과 전후 경제기적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동아시아국가들간 정치, 경제, 문화, 심리적 대결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전재국 1999:190). 냉전종식과 함께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적 승리를 바탕으로 20세기에 이어 21세기도 계속 '미국의 시대(American Century)'가 되기 위해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정책 목표로 천명하고, 그 일환으로서 새로운 경쟁상대인 동아시아를 억누르기 위한 정책들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을 무기로 삼아 동아시아의 중상주의적 무역관행에 쐐기를 박고 권위주의체제의 정권안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외교

19) 미국의 일차적 견제대상은 동남아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었다.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엔블럭(Yen Bloc)의 등장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 길들이기(Japan bashing)에 나섰으며, 미국패권에 대한 잠재적 최대 도전세력인 중국에 대한 인권 탄압, 불공정무역, 무역수지 불균형, 지적소유권 침해, 무기수출 등의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대중 압력을 가속화하였다(전재국 1999:191~192).

를 무실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민중의 힘을 억제할 목표를 가지고, 서구적 가치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정면 부인하고 그 대신 아시아적 가치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Kishore Mahbubani 1993; Fareed Zakaria 1994). 이들에 의하면 아시아 사회는 (유교적) 공동체주의적 가치규범과 권위, 질서, 조화의 강조, 근검절약 정신과 승문사상 등의 문화전통 덕분에 고도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이와 같은 문화적 전통이 부재한 서구사회는 끊임 없는 정치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및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인권외교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규정하고, 1948년 UN 인권선언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한편, 일부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서구적 가치는 유럽인들의 가치에 불과하며 아시아적 가치야말로 인류보편적 가치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애초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진원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일본, 중국, 태국 등 역내 정치지도자 및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어 갔다.²⁰⁾

반면 구미지역에서는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적 가치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서구적 가치의 절대적 보편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아시아의 도전에 응전하는 양상을 보였다(Peter R. Moody, Jr. 1966, 1998). 무엇보다도 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전통, 종교, 인종, 이념 등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아시아론자들이 내세우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도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축조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서구론자들은 아시아적 가치를 오히려 서

20) 애초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수상과 토미코, 마흐부바니 등 외교관들에 의해 제기된 아시아적 가치론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대외적으로 강변되었고, 이후 일본의 이시하라, 중국의 리쑹그루, 태국의 짜이와트 등 역내 정치인, 학자들에 의해 소위 싱가포르 학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유교민주주의를 역설하는 일부 한국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논쟁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구문화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아시아문화의 독자적 정체성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특히 서구론자들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적 가치에서 유래하는 족벌주의(nepotism), 정실주의(cronyism), 권위주의,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에 그 근원이 있다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동서간 가치논쟁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Han Sung-Joo 1999:3~9).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밝혀둘 점은 먼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성격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소위 문화결정론적(cultural determinist) 시각에서만 분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문화전통이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거나 정치패턴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민주화는 문화적 변수 이외에 수많은 대내외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론은 오늘날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과거의 문화적 유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를 오로지 보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그릇된 논쟁을 재생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를 과거의 유산(특히 유교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접근할 때 동아시아인들을 상상된 문화영역 속에 가두어버리기 때문이다.²¹⁾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의 창출 또는 함양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 균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동서간 가치논쟁이 극단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동안,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론이 등장하여 역내찬반 논쟁으로 비화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권인 필리핀은 물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유교문화권내에서도 아시아적 가치론에

21) 대표적으로 아시아적 가치란 일차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설명되고 있는바, 과연 유교만이 아시아적 가치인가 하는 비판과 함께, 동아시아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이슬람까지 다양한 문화전통이 병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여 논쟁을 가열시킨 바 있다.²²⁾ 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가치론의 근원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지도자들의 공식입장에 항변하는 정치엘리트들이 등장하여 국내정치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²³⁾ 결국 아시아적 가치논쟁은 그릇된 문화적 해석 때문에 역내국가들간 정체성의 함양에도 기여하지 못했으며, 각국의 국내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도 못했던 것이다.

III. 동아시아 정체성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1. 동아시아 정체성의 현주소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기본구조는 1945년 이후 미국에 의해 형성되었고, 역내적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와서 제도적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단계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가?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당국자들간에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96년 ASEM의 출범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처음으로 지역적 정체성의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

22)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대만의 이등휘 총통 등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3) 말레이시아의 부수상 이브라힘은 마하티르의 아시아적 가치론에 저항하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형집행 상태가 되었는데, 미국 등 서방국들이 이를 비난하면서 심각한 국제관심사가 된 바 있다.

었다. ASEM의 출범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로 통합된 유럽의 EU와 협상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간 내부적 의견조율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수렴하고 공동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현재도 ASEM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간 외무장관 등 각종 각료급 회의 및 고위실무급 회의 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당국자들간 지역적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게 된 계기는 역시 1997년부터 계속된 ASEAN+3 협력구도이다.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물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외무장관 및 고위실무급 회의뿐만 아니라,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회의, 매년 수 차례 개최되는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등 기타 관련회의들은 역내각국의 외교정책 당국자들간 공동의 지역적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역내각국의 외교정책 입안자 수준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동아시아 각국의 정책 엘리트 수준에서의 지역적 정체성은 이제 그 형성의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반면 과연 동아시아 각국의 일반대중 또는 사회 중간층과 같은 특정계층간도 이와 같은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동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지역적 정체성은 생소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의 관심밖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존재하더라도 아직 분명히

24) 이외에 동아시아 각국의 민간인 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도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향후 출범할 예정인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은 정부관료, 학자, 기업인 등 민간대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하에 역내협력에 관한 think-tank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분야의 정부 및 민간 지도자들간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관찰자들은 적어도 동아시아의 중간계급간에는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의 힘에 의한 지역통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일본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서울, 도쿄, 상해, 타이베이, 홍콩, 방콕, 쿠알라 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중산층(middle class) 사이에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 부상하는 동아시아 중간계급의 핵심은 전문가 집단인데, 이들은 두,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부유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이며, 취향과 스타일에 있어서 세계화된 측면과 지역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에 능통하며, 영어로 사업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한다. 또한 이들은 미국방식을 이해하고 미국식 사업을 하며, 자녀들을 영어로 교육시키고 미국대학에 보내기도 하며, 미국식 표준의 건강을 챙긴다. 하지만 이들은 홍콩,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즐기며, 자국의 대중문화와 음식을 즐긴다. 이제 이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지역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민주화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들이 사회, 정치체제를 전략적으로 그들의 선호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선호는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의 문화적 특징들은 그들의 패션, 취향, 스타일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다.”(Takashi Shiraishi 2001:32)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사회형성(social formation) 과정에 있어서 중간계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져야 하

며, 사회 내에서 그들의 전략적 위치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쟁은 결코 간단히 다루어질 없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중산층간 일종의 지역적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간 중산층에 대한 심각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이나 한국, 대만과 같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산업국가의 경우는 사회의 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우 중산층의 존재는 아직도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사회중간계층이 민주화를 주도하는 핵심적 전략세력으로 간주되기는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에 있어서 중간계층은 많은 경우 권위주의적 권력핵심부와 매우 유사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동남아의 경우 중산층보다는 경제위기나 민주화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같은 외생적 환경변수들이 체제의 민주화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Amitav Acharya 1999:418~432). 따라서 동아시아국가들의 중산층 사이에 공유되는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과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적 정체성이란 여전히 극히 소수의 정책엘리트와 특정사회계층간 일정부분에 대해 한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동아시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포럼」 추진

향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편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일반국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함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간 체육대회, 예술행사, 영화 및 가요

제, 교수 및 학생교환, 언론인 상호방문, 기업인들간 유대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과성 행사나 정기적 접촉 및 교환만으로는 동아시아 주민전체가 스스로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을 함양하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차적으로 역사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 있듯이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험적 범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해양적 정체성은 매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문화결정론적 환원론에 빠져서는 안된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만 집착할 경우, “아시아적 가치” 논쟁처럼 동아시아를 전통문화의 틀 안에 국한하여 그릇된 보수적 논의만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아시아 정체성을 단순히 문화적 유산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계획(planning)”으로 인식할 경우, 동아시아를 하나의 “역사적 존재(historical being)”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이라는 것은 지적 실험 또는 담론을 의미한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계획으로 인식한다면 이 지역을 변치 않는 문화적 통일체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 규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계획이 보편성을 가지려면 동아시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 정치, 경제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²⁵⁾

따라서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계획으로서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즉 자민족 중심의 근대적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 왜곡, 윤색된 각국의 역사 대신에, “세계화”라는

25) 아리프 달릭,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2000: 109~112).

거대한 변화에 상응하여 과거 역사기술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삶의 궤적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일상적 필요에 부응하고 상호의존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초지방적,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을 창출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포럼(East Asian Forum for Regional Identity)”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적으로 공통성보다는 다양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정체성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제반 방안들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과거 자민족 중심주의 역사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 할 것이다. 포럼 운영상 필요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등 분야별 소위를 둘 수 있으며, 소위 위원에는 반드시 학자만이 아니라 예술, 종교, 언론, 기업, NGO 등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 포럼은 각국 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되 기본적으로 민간차원(track II)에서 운영되어 할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이 포럼에 직접 개입할 경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포럼은 중장기적으로(적어도 5이상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포럼의 초기 목적인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역사기술”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는데 최소한 5년 정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포럼의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들이 동아시아 각국의 초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어야만,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일반대중들이 이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ASEAN+3 협력,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 해양적 정체성,
동아시아 지역 정책성 포럼**

참고문헌

- 박사명 외.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 배궁찬. 1995. “대중화 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책연구시리즈 1995-5」, 외교안보연구원.
- 배궁찬. 200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과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1-36」, 외교안보연구원.
- 전재국. 1999.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제1호).
- 정문길 외. 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 외.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Adler, Emanuel. 1997.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2.
- Amitav, Acharya. 1999(May/June). “Southeast Asia's Democratic Movement.” *Asian Survey*, Vol. 39. No. 3.
- Beasley, W.G. 외. 1999. 『일본 근현대사』, 장인성 역, 을유문화사
- Borthwick, Mark. 1992. *Pacific Century: The Emergence of Modern Pacific Asia*. Boulder: Westview Press.
- Cum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 Dittmer, Lowell., Haruhiro Fukai, Peter N.S. Lee. 2000. *Informal Politics in 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st Asian Vision Group.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n Vision Group Report. October 31.
- Fairbank, John 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areed, Zakaria. 1994(March/April).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 Frankel, J. and M. Kahler, eds. 1993. *Regionalism and Rival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acific As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mashita, Takeshi. 2001. "Regional Dynamism and the Maritime Identity of Asia: Political Space and Cultural Boundaries in Modern East Asia,"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Conditions and Prospects*.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December 17.
- Han Sung-Joo. ed. 1999. *Changing Values in Asia: Their Impact on Governance and Development*. Singapore: ISEAS.
- Katzenstein, Peter J. and Takashi Shiraishi, eds., 1997.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hbubani, Kishore. 1993. "The Dangers of Decadence: What the Rest Can Teach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72. No. 4
- Moody, Peter R., Jr. 1996. "Asian Valu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0. No. 1
- Reid, Anthony. 199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s: Yale University Press

- Seagrave Sterling. 1997. 『중국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제국, 화교』. 원경주 역. 프리미엄박스.
- Shiraishi, Takashi. 2001. "East Asia Region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Conditions and Prospects*.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December 17.
- Wolters, O. W.. 1998.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ASEAN+3 Cooperation and Regional Identity

Geung Chan Ba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Recently, East Asia is witnessing the emergence of a new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namely, ASEAN+3. The ASEAN+3 framework is certainly taking root as the central mechanism fo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However, what it lacks is regional identity as a prerequisi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closer regional unity and cooperation. Fostering a strong sense of East Asian identity and congeniality is essential for expediting genuine regional cooperation and, moreover, for helping reach the ultimate goal of East Asian integration.

Yet, it is no easy task to develop a regional identity in a region like East Asia with huge diversities in it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while disparities between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are even more conspicuous. Nonetheless, regional identity is an evolving rather than a fixed concept, such that regional identity in East Asia has and is undergoing change.

It is important to begin with a fresh review of East Asian history based on a maritime identity of the region, which offers a useful context for exploring the shared historical background. In order to create a new East Asian regional identity, the history of the region needs to be rewritten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var-

ious life experiences of the peoples of East Asia. In this regard, East Asian countries need to consider the creation of an "East Asian Forum for Regional Identity" in which historians and scholars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rewrite East Asian history through active exchanges their knowledge and insights.

Key Word: ASEAN+3 Cooperation, Regional Identity of East Asia, Maritime Identity, East Asian Forum for Regional Identity